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대통령님께서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06.5.2 제4기 지속위 출범시)하심에 따라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및 실행방안을 보고드림

< 요 약 >

1. 이 로드맵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잡힌 지역발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주민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실행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프로세스, 추진체계확립,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 모델 사례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역사업에 적용·확산** 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앞으로 각기 추진되던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 전략의 통합과 **적정개발 수준에 대한 주민합의**를 통하여 **갈등예방적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이 확산되도록 **선도 지자체 지원** 및 **법·제도적 체계 마련** 등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지시가 필요**합니다.

➲ 정책보고서로 가기

지방 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요약)

❑ 검토 배경

❍ 제4기 지속위 출범시 대통령님께서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개발과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심('06.5.2, 제4기 지속위 위촉장 수여 및 환담행사)

❍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의 발전방향을 합의하는 제도와 정책 기반의 조성이 긴요

❍ 지금까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추진경과

❍ 기본구상 준비회의 개최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TF팀(팀장 김병완 광주대 교수외 8인) 구성·운영('06.5.26~)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안)' 마련 공론화 진행

- 지역단체·지방공무원 간담회 및 지방의제21추진기구 전국 총·처장 회의('06.8),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06.9.6)
- 지속위 전문위원, 본위원, 자문위원 의견수렴·보완('06.10~11)
- 지방의제21전국대회 심포지움(전남 순천, '06.10), 전문가 및 전국 지방의제21 사무국장단 간담회('06.11)
- 관계부처 의견수렴('06.11~12)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기획관 의견 수렴('06.12)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 공론화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비전과 추진전략

❍ 비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 추진전략

- 지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유도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선도 지자체 선정·육성을 통한 지원 및 단계적 확산

❑ 중점 추진과제 : 4대분야 7대 중점과제

4대 분야	7대 중점 과제
Ⅰ. 비전 확립	1.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협약 체결
	2.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Ⅱ. 추진 체계 구축	3.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위 설치·운영 강화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Ⅲ. 실천 역량 강화	5.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
	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Ⅳ. 평가 체계 운영	7.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목표 : 2012년(리우+20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2006년		2009년		2012년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협약	8개 지자체	→	100개 지자체	→	전체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	-	→	16개 시·도	→	전체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3개 지자체	→	50개 지자체	→	전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방행정 혁신	1개 지자체	→	100개 지자체	→	전체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3개 지자체	→	50개 지자체	→	전체 지자체
선도지자체 선정 및 단계적 확산	-	→	50개 지자체	→	전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공무원교육	-	→	16개 시·도	→	전체 지자체
지방지속가능성평가	-	→	16개 시·도	→	전체 지자체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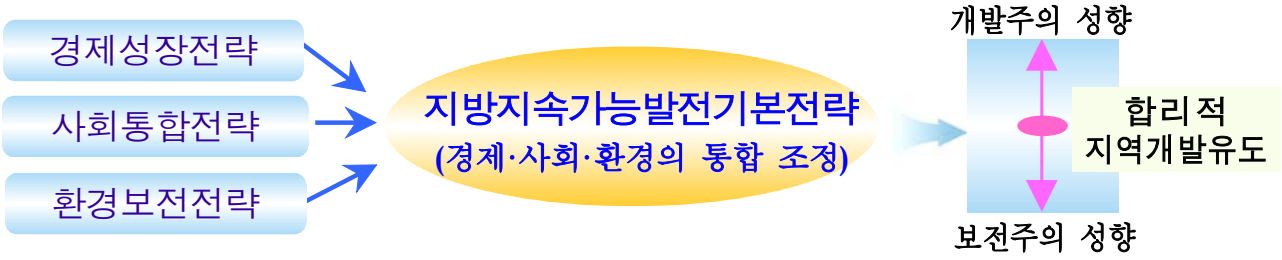
❍ 주민과 합의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정책수립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여 합리적 **지역발전 모델 확산**

❍ 각기 추진되던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 전략이 통합·조정되고, **지역에 알맞은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합의**를 통하여 **갈등 예방적 균형발전 가능**

❍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과 실천기반을 갖추게 되어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확산·정착**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통한 난개발 예방과 합리적 지역개발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로드맵의 내실있는 추진·점검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정부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하여 관리

※ 추진단은 로드맵의 추진·점검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예정

❍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방안]**을 마련('07.6)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예정

❑ 조치사항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선도지자체 지원** 및 **법제도적인 체계 마련**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실 필요

➲ 되돌아 가기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보고서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2007. 3. 19.

PCSD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차 례 >

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진단 ····· 7

Ⅱ.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약요인 ····· 8

Ⅲ.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 9

1 비전과 목표 ····· 9

2 추진전략 ····· 10

Ⅳ.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중점추진과제 ····· 11

1 비전확립 ····· 11

2 추진체계 구축 ····· 12

3 실천역량 강화 ····· 14

4 평가체계 운영 ····· 16

Ⅴ. 기대효과 ····· 17

Ⅵ.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 18

1 추진일정 ····· 18

2 주체별 역할분담 ····· 19

<참고자료>

1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노력과 지방의제21 ·· 20

2 국내외 선진사례 ····· 21

I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진단

◈ 우리나라는 30여년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도시와 농촌 모두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도시 지역 ⇨ 상대적으로 환경적 · 사회적 지속가능성 낮음

❍ 인구밀집, 생활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과 빈부격차가 심화

◈ 농촌지역 ⇨ 상대적으로 경제적 · 사회적 지속가능성 낮음

❍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정주체계가 붕괴되고, 농업경쟁력 감소

< 지방의 지속가능성 >

구 분		현황과 실태
도시 지역	경제분야	◆ GRDP(지역내총생산) 도시 집중: 수도권비중 47.4%('05) ◆ 도시근로자 소득 증가: 가구 월평균소득 전년대비 5.9% 증가('05)
	사회분야	◆ 도시근로자 계층간 소득격차 상존: 상·하위20% 소득격차 5.41배('05) ◆ 수도권의 인구가 48.3%로 과밀(면적은 11.8%)('05)
	환경분야	◆ 녹지공간 부족: 서울·광주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전무('05) ◆ 환경문제 심각: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연간 최대 10조원 손실
농촌 지역	경제분야	◆ 농가소득/도시소득의 격차 심화: 99.5%('94)→78.2%('05) ◆ 농가당 부채 증가: 2,721만원('05), 10년동안 3배 증가
	사회분야	◆ 농촌인구의 노령화 심화: 노인비율이 18.6%로 도시의 2.6배('05) ◆ 의료여건 열악: 전체 의료기관중 농촌소재율 12.4%('05)
	환경분야	◆ 녹지, 대기, 수질 등의 자연환경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상수도 보급률 취약: 면지역 35.2%(서울 100%, '05)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II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약요인

❑ 경제·사회·환경정책의 불균형 상존

❍ 지역계획, 예산배분, 조직위상에서 지역개발 및 경제정책의 정책 우선순위와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은 낮음

※ 예산집행 기준으로, 지역개발 관련 분야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 69조 594억원의 78.9%(54조 5,047억원)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5.5%, 환경예산은 1.6%에 불과

※ 민선 3기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9,404건의 공약사업 중 지역경제개발 분야 3,104건(33.0%), 지역사회개발 분야 1,104건(11.7%)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44.7%를 차지

❑ 통합성이 결여된 '제로섬(zero-sum)' 정책으로 정책효과 반감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관련 정책들이 상호 영향이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 도로건설정책 ⇔ 생태축 보전정책, 수량정책 ⇔ 수질정책

※ 과거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복원 등으로 사회적·환경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그 효과가 반감됨 → 통합적 정책접근 필요

❍ 분절화된 제로섬 정책은 정책효과 상충(trade-off) 또는 감소문제, 한정된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흡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해 오던 일부 지자체도 자치단체장 교체로 단절되는 사례 빈번

❍ 지속가능발전 정책기조가 외부의 정치·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 공고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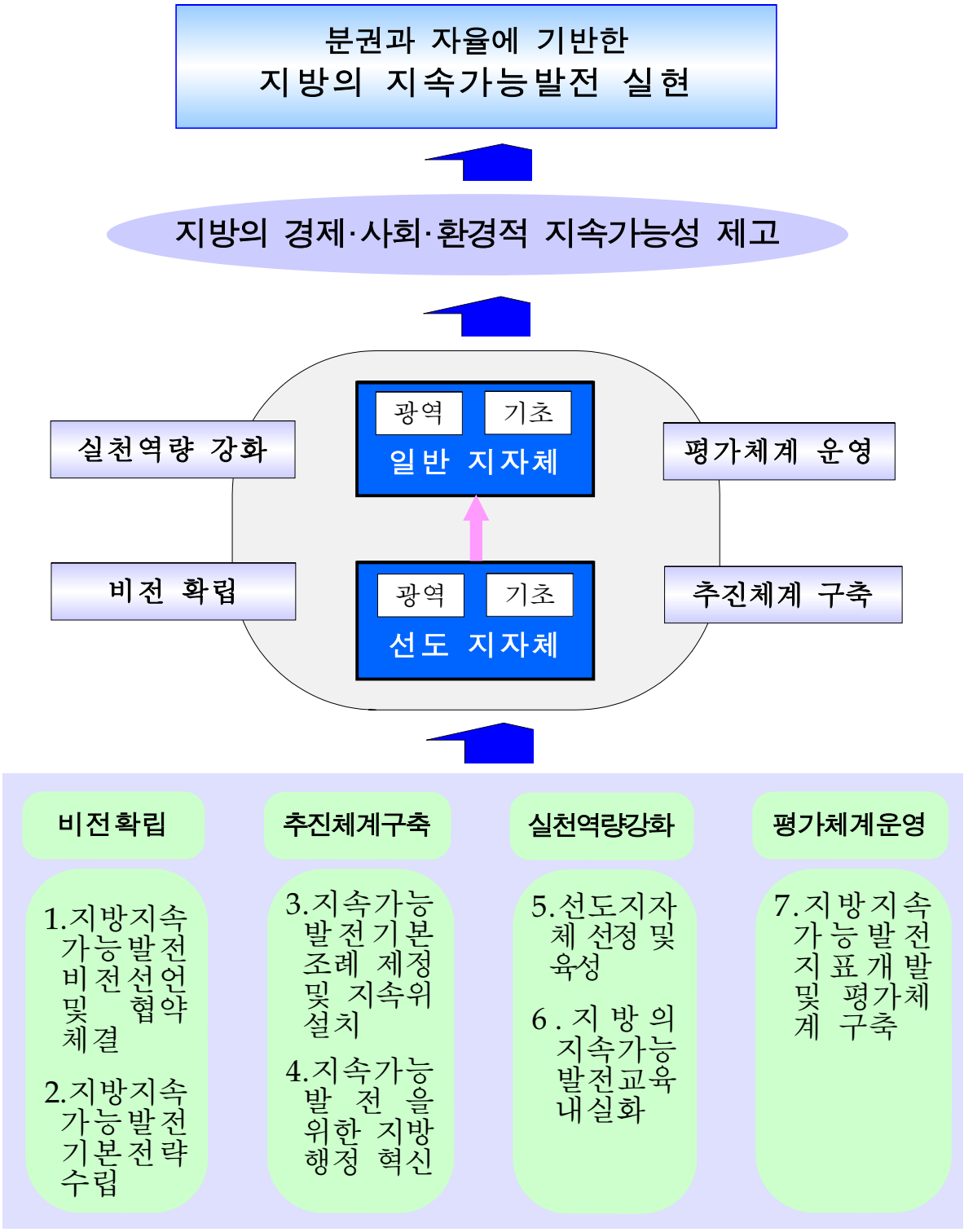
❑ 민·관 협력 및 민간의 실질적 지방정책 참여 기회 미흡

❍ 지방의제21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취약한 법·제도적 기반과 환경부문에 국한된 사업내용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2006년말 현재 250개 지자체중 92%인 230개 지자체가 지방의제21 수립·추진

III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추진전략

❑ 지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유도

❍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각 부문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경제·사회·환경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 지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유도

- 단기·외형적 경제 효과 중심의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기반 조성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지방의 사회·문화적 자산과 환경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전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근거 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지원, 장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지원

❑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육성·지원을 통한 성과의 단계적 확산

❍ 지자체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 한국형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IV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중점 추진과제

1 비전 확립

①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협약 체결

❑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담은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지역사회 합의를 토대로 지역발전 계획과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명시

❍ UN 등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제21을 비롯 기존의 지역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비전 선언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민·관의 협약 체결

❍ 비전 선언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합의형성을 토대로 지자체장과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공동협약식 추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비전 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약 가이드라인 제시

※ 순천시, 담양군 등 8개 기초 지자체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06.10.19)

②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 지침 개발 및 실효성 확보

❍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내용·절차 등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원의 파트너십에 근거 수립하고, 예산계획·평가지표 등 포함

※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근거 및 세부내용 등을 명시

- 기존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방의제21을 비롯 다양한 비전과 계획을 발전시켜 수립함

❍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통합, 조율

- 기본전략을 토대로 도시/환경계획, 지자체 중장기 발전계획, 시(군)정계획 등의 정책연계성 강화

2 추진체계 구축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조례로 마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기구의 위상, 역할의 제도화

-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근거 마련

[예] 현재 158개 지자체의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 근거: 환경조례(58.2%), 설치운영(지원)조례(29.1%), 지원조례(7.0%), 민간단체보조금조례(0.6%), 보조금조례(0.6%), 규칙(2.0%), 정관(1.3%)

❍ 선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적극 지원

- 지방지속가능발전추진단(TF)에서 조례준칙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지원

- 선도지자체 조례제정 및 운영경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기 설치한 지자체 경우 법적근거 미비로 운영 한계 : 경기('03), 담양('03), 대전('05)

❍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과정에 협의토록 하여 지방의 난개발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 도시계획, 관광계획 등 관련 행정계획 등에 대하여 다양한 당사자로 구성된 지속위의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불필요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합리적 성장을 유도

④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 기획실 등 업무 총괄·기획부서의 중요과제로 지속가능발전업무 부여

❍ 중앙부처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정·운영을 평가하여, 일부 선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도입·운영

❍ 총괄부서 담당공무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경제·사회·환경부문의 통합 및 조정 역량 강화

❑ 경제·사회·환경부서장 정책협의와 민관 거버넌스 증진을 통해 정책통합과 협력을 지향하고 정책의 수용력을 강화

❍ 선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의 구조와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

❍ 지역내 민관 거버넌스 증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추진기구 등)의 민간 사무국 혹은 민-관 공동사무국의 구성을 촉진·활성화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지방의 개발 관련 주요 심의기구에 시민대표 등 민간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 기구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변경, 위원의 경우 시민대표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등 재편방안을 추진

※ 서울시의 경우 전체 77개 위원회에 참여중인 민간위촉 위원 비율이 82% 수준이지만, 시민대표의 참여비율 제고 노력 필요

3 실천역량 강화

⑤ 지속가능발전 선도(시범) 지자체 선정 및 육성

❑ 지속가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그 여건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지속가능발전 혁신 시범지자체'로 선정,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선정 및 지원방안, 절차 및 기준 등 관련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질적 지원을 수행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으로 구성

- 지역별 여건과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시범적인 한국형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구축

❍ 시범(선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

- 지방지속가능발전 관련 현황·인력(전문가풀)·계획 등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On-line 등 적극 활용)

-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참여와 혁신을 촉발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⑥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역량진단 지원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수준 및 역량 진단을 위한 진단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속위에서 진단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작성·보급

❍ 진단 결과에 따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호보 방안 등 마련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재 개발·보급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 풀 운영

❑ 청소년·주민 및 기업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확대

❍ 학교 차원의 통합교과과정 개발, 교육청 차원의 교사교육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현장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지역순회 교육(예: 지속가능한 열린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차원의 직원교육 실시 및 홍보 활동 강화

❑ 지역차원의 UN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산시킴

❍ 현재 UN의 8번째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가 경남 통영시에 설치되어 운영중이나 중부권 등으로 확산시켜 지역거점 확보추진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방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NGO 역할 확대

❍ 민주시민, 인권, 평화, 통일, 환경 등 다양한 시민교육 경험들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종합하여 사회통합교육으로 확대 발전

4 평가체계 운영

⑦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 추진

❍ 행정자치부 등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포함하도록 추진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 주민참여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운영 지침마련

-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량 반영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자료 축적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강화

❍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전환을 유도

- 행정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 조직, 예산, 개발방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V 기대효과

❑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여 합리적 **지역 발전 모델 확산**

❍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하며, 변화된 시스템을 개별 지역개발 사업에 적용하여 난개발 예방

❍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

❑ 각기 추진되던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 전략이 통합·조정되고, **적정 개발 수준에 대한 주민합의**를 통하여 **갈등예방적 균형발전 가능**

❍ 지역에서 각기 추진되던 경제정책(개발중심), 사회정책(재분배중심), 환경정책(보전중심)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조화되어, 정책간 상생효과를 얻는 구조로 전환

❍ 합리적 적정개발에 대한 주민합의를 통해 갈등예방적 균형발전 가능

❑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과 실천기반을 갖추게 되어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확보**

❍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주민과 이에 편승하는 자치단체장의 사고를 전환시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구축

❍ 지방분권 및 혁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을 수립·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로 **생명력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확산·정착**

❍ 민·관·산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발전으로 자발적 참여, 책임과 권한 공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 구성원의 인식전환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확산·정착

VI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1 추진일정

분야	주요 과제	세부 내용	'07		'08		'09		주관기관	협조기관
			상	하	상	하	상	하		
비전 확립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협약체결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 마련 -비전 선언 및 협약 체결							지자체	지속위 행자부 환경부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	-기본전략수립 지침마련 -광역지자체 기본전략 수립							지속위 지자체	행자부 환경부
추진 체계 구축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위 설치·운영강화	-기본조례준칙 마련 -광역지자체 기본조례 제정 -지속위 설치 확대 및 운영강화							지자체	지속위 행자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지방행정 혁신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업무의 총괄부서 부여 -심의기구 주민참여 확대 -민관 거버넌스기구 활성화							지자체	지속위 행자부 환경부
추진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지원	-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선도지자체 네트워크 구성							지속위	행자부 균형위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지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인식진단 매뉴얼 마련·보급 -지자체 진단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공무원 교육원	지자체 지속위 환경부
평가 체계 운영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평가체계 구축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평가체계 구축 -평가, 지속가능성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							지자체 행자부	지속위

* 과제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필요

('07.3.19, 월,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주체별 역할분담

목표	과제	주체별 역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전 확립	비전 선언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약 지원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약 체결
	계획 수립	❖진단 매뉴얼 개발 및 진단·컨설팅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법적 근거 마련 및 수립지침 개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토대 구축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시정운영계획, 중장기계획과 연계
추진 체계 구축	제도기반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행정조직 혁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혁신 (부처내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지정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 행정 강화 ❖경제·사회·환경부서장 정책협의 강화 ❖심의기구 등에 시민참여 확대
실천 역량 강화	선도지자체 육성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지원 체계 마련	❖선도지자체를 모델개발 및 확산 ❖지방의제활동을 통한 '참여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교육 강화	❖국가공무원 대상 SD 교육 ❖국가적 SD 교육·홍보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방안 마련	❖지방공무원 대상 SD 교육 ❖지역적 SD 교육·홍보 강화 ❖지역간 교류활동을 통한 경험 및 자료, 정보의 공유
평가 체계 구축	지표개발 및 평가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자체 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평가 과정의 시민참여 기반 조성

참고1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노력과 지방의제21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을 채택**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수립·실천하도록 권고

❍ 우리나라는 '95년 지역차원에서 시작하여 중앙차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됨

- '지방의제21'을 '95년 **부산시가 최초로 수립**한 이후, **213개** 지자체가 **수립완료(92%)**하고 **16개** 지자체가 현재 **수립추진중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치·운영('00.9)하고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05.6)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서울시('00년), 경기도('03년), 전남 담양군('03년), 대전시('04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04.6)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민·관·기업이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역할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다른 나라와 달리, NGO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임.
-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시작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주민자치와 참여의 시험모델이자 훈련장이 되고 있음

참고2 국내외 선진 사례

구분		지역	비전 확립	추진시스템 구축	실천역량 강화	평가체계 구축	주요 성과
국내	농촌형	담양	◆"국제적 위상의 생태도시 담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의제21협의회 설치조례 제정 ◆생태도시과, 지속가능건설과로 전환	◆생태도시 모델(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린거버넌스, 평가체계) 구축 ◆친환경 주거/경관, 에코투어리즘, 친환경산업/농업, 지속가능한 사회정책 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평가 ◆생태도시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그린시티 지정(환경부) ◆OECD 평가 및 사례 소개
		예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도시"	◆지방의제21 지원조례 제정	◆예산읍 녹지·생태축복원 ◆태양광발전 시설도입 ◆친환경농업의 확대추진 ◆지속가능한 복지 및 사회정책 추진	◆행정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지속가능행정 평가시스템구축	◆환경행정 ISO인증
	도시형	청주	◆"더불어 살고 싶은 활기찬 문화도시"	◆청주시환경기본조례('01) ◆푸른청주21에서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확대개편('03)(소관:기획예산과)	◆시민참여를 통한 '청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 및 로드맵' 개발('01-'03) ◆시민참여 청주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개발('05-'06)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사회분야 지표개선실천사업 전개	◆청주시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06)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위원회 구성(예정'07)	◆그린시티 지정(환경부) ◆환경부장관 표창('02, '04, '05)
		순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축	◆지방의제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지방의제21 추진체계개편 ◆지속가능 평가 및 실천중심 의제21 기구개편	◆지속가능도시추진지표 개발/평가 ◆지표평가위원회 구성	◆그린시티 지정(환경부) ◆지속가능도시국제센타(ICSC)가입 및 사례소개
국외	농촌형	덴마크 콜링	◆친환경 지역발전 실현	◆실천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련	◆각 학교가 관내 하천의 일정 구역을 선정하여 연구 및 복원사업		◆농민들의 영농형태를 개선 ◆하천 추가 복원
		일본 아야정	◆녹색관광의 중심지	◆자치공민관 ◆유기농산물인정기관	◆숲과 생태계 보존, 유기농업, 역사문화자원보존을 연계시킨 녹색관광과 친환경지역개발정책 추진		◆일본 제일의 녹색관광명소
	도시형	핀란드 헬싱키	◆"도시행정의 환경영향 감소"	◆30개 부서 가운데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연락망 조직 구축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부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 ◆1,000여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안		◆약300여개의 사업이 직접 집행
		브라질 꾸리찌바	◆친환경 대중교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태도시 실현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 ◆꾸리찌바도시공사의 설립으로 요금 통제 및 재정적 위험 최소화	◆버스도로망 완전 연결·통합 및 경궤도버스체계 도입 ◆단거리통행자가 교외빈민가나 위성도시의 장거리통행자를 보조하는 사회적 요금제도의 도입 ◆장애인 편의를 위한 특수교통 통합체계 구축 ◆100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망 완비		◆승하차 시간 단축 ◆장애인 편의 증진 ◆승객수송량 증가 ◆대기오염 감소 ◆보행자의 안전 확보